

우리 경제의 活路—기술개발에서 찾아야...

편집인 칼럼



● 羅 柄 扇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防産과 民需의 구분이 없어져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에서
방산의 기술은 곧 민수산업의 기술이요
민수의 기술은 곧 방산기술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기술개발 문제가
방위산업의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방위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1백억불을 상회하는 무역적자와 함께 우리 경제에는 인력난과 자금난까지 겹쳐 깊은 어려움의 늪으로 침잠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무역수지의 적자폭 확대가 커다란 짐이 아닐수 없으며, 이의 원인이 경쟁력 저하에 있고, 경쟁력 상실의 주원인이 기술의 현격한 차이에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력난이나 자금난의 해소도 빠른 시일안에 해소되기가 어려운 과제이겠지만, 기술의 격차는 단기간에 해결할수 없는 難題입니다. 결국 그동안 기술개발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반도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반도체산업은 세계의 주요 공급기지로 부상하는등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면에서는 기억소자 부문에서만 선진국수준에 접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특히 설계기술의 자립도는 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재료와 장비생산기술은 각각 10%와 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상황이 대부분의 업계에서 지속되고 있었지만, 때마침 찾아든 「3低」의 물결속에 경상흑자가 이어지면서, 마치 선진국이 된듯한 착각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소비는 갈수록 급증하고, 물가가 오르며, 성실히 일하는 근로정신은 실종되어버린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지적처럼 「삼폐인만 일찍 터트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해결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며, 최근 과기처가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포괄적인 지원체제를 준비중인 것은 흐뭇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기술개발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심각한 문제인식과 함께 범국가적인 노력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인력과 투자비를 살펴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인력은 미국이나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관련인력은 2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투자비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더욱 극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IBM사의 경우 1년 연구개발비가 65억불이고, 일본의 히타치사는 30억불, 나아가 1개 대학교인 미국의 MIT가 9억불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비는 35억불(약 2조6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의 방위산업에서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초 자주국방의 절대적 필요성과 중화학공업 육성전략에 맞물려 태동한 우리의 방위산업은, 80년대 중반에 기본병기의 양산과 일부 고도정밀병기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부단한 노력 속에 조기전력화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과 전문화·계열화된 생산체제의 구축에 이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더구나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한 정부 예산수요의 점증과 국내소요의 한계, 해외수출의 제약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방산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防産과 民需의 구분이 거의 없어져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에서, 이제 방산의 기술이 곧 우리 민수산업의 기술이요, 민수의 기술이 곧 방산기술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기술개발 소홀의 문제가 방산의 문제인 것이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방위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간 2천5백억불에 달하는 국방예산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책정하며, 연방정부예산에서도 별도의 연구개발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반해 우리의 연구개발비는 지난 88년의 경우 1.5%선까지 내려갔으며, 현재는 국방예산의 2%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선진기술의 이전 기피현상과 함께 낮은 비율의 국방연구개발 투자는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기술격차의 몸살과 함께 국제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장차 통일이후에도 세계 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자위력의 확보가 절대적인 과제이며, 이는 戰力건설을 전제로 한 방위산업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방위산업은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활성화속에 현재까지 축적된 기술기반을 토대로 첨단기술을 개발해나갈 것이며, 장차전에 대비한 첨단무기체계 개발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년, 백년 앞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 이겠지만, 우리에게는 10년, 20년 후의 장기·비전(vision) 제시와 함께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력의 提高를 위해, 산·학·관·군 모두의 지혜를 짜내어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방위산업의 활성화는 곧 우리 경제난국을 타개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